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

의 안 번 호	4625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원배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박순호, 신진미, 박용준, 함미정, 최혜연, 김세원, 최병순, 정홍근, 김동성, 최미자, 양유환, 송용석, 정인화, 김태민, 정능호, 오세길, 김명현(19인)

1. 주 문

○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송영차량에 대해 전용 색상을 지정하고 식별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수반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매일 수송하는 송영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어르신들의 생명권 및 건강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어르신 송영차량에 대한 전용색상이나 특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진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송영차량 전용 표시제 도입이 필요함

3. 수신처: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건의안: 별첨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7%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돌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특히 전국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은 2021년 2천6백여 개소에서 2025년 4천여 개소로 늘어 불과 4년 만에 54%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매일 수송하는 송영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일은 어르신들의 생명권 및 건강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황색 차체 색상, 안전 표지, 특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회적 보호와 양보 운전 문화가 안착되어 있다.

반면 어르신 송영차량은 대부분 승용·승합 형태의 일반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로 위 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운전사 배치 기준만 있을 뿐, 전용 색상이나 특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진 어르신들의 승하차 시 후방 추돌이나 정차 중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쉽게 알아보지 못해 불안해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사회 및 현장 관계자들은 어르신 송영차량에 통일된 전용 색상과 식별 표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양보 운전 유도 및 정차 중 안전거리 확보, 고령 어르신의 탑승 차량 식별 편의 증대,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따라서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는 어르신의 이동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 송영차량의 전용 색상 지정, 식별 표지 부착 및 교통약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차량 도색 및 안전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라.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이 교통약자 보호와 어르신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으로 안심 돌봄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일동